

사기·해킹서 자금세탁까지... 몸살 앓는 가상화폐 시장

비정상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

16 가상화폐의 그림자

사고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취약한 보안·불안정한 시세 여전 관련 입법 미뤄져 자산 보호 난항

#. A씨는 B업체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들었다. B업체가 이더리움 코인을 채굴하는 공장을 운영하는데 한 구좌에 950만원을 투자하면 월 18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유혹이었다. A씨는 투자 후 5개월 뒤면 원금이 회수되는데다 같은 방법으로 투자하면 무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며칠 뒤 B업체는 불법금융행위로 적발됐다.

블록체인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축인 가상화폐 시장이 사기와 가짜 뉴스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관리도 감독도 하지 않는 가상화폐 시장의 틈을 노린 해킹 등 각종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것. 손놓고 바라보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투자자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



1일 암호화폐거래소 빗썸 내 비트코인 시세추이.

/빗썸 홈페이지 캡처

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사수신 등 사회문제로...

1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한국업체가 설립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30여 개다. 신규 설립을 준비하거나 검토하는 업체도 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은 매출 3030억원, 영업이익 2186억원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정부가 실시한 거래은행을 통해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 거래실명제 도입, 입금 제한 등의 규제에도 투기 열기가 식지 않는 모양새다.

문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이 여

전히 취약하고 시세가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것.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사건은 총 7건으로, 1288억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부정 인출됐다. 해킹을 당한 일부 거래소는 정부가 보안 점검을 한 이후 해킹 사건이 또 다시 터진 곳도 있었다.

지난달 5일에는 미국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가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계획을 중단했다는 가짜 뉴스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이틀간 폭락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기준으로 5일

820만원대에 거래되던 비트코인 가격은 다음날인 6일 740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 말 한마디에 시세가 출렁일 정도로 가상화폐시장이 불안정하다는 방증이다.

금융당국도 가상화폐를 악용한 범죄수익 은닉 등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금융거래가 많아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제20차 통합 금융감독기구회의'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한국은 데이터,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금융서비스의 혁신적 진화를 가속하는 지원책을 내는 동시에 가상통화나 가상화폐공개(ICO) 등에 수반되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선 투기 과열을 진정시키고,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없는 정부, 피해는 투자자 몫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관련 긴급 대책' 이후 한차례도 관련 법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국회에도 총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투자자의 불안감이 증폭되자 지난 7월 한국블록체인협회 1차 자율규제 심사를 벌이고 자체심사에 나섰다. 하지만 해

킹이 발생한 거래소를 포함한 12곳 모두 심사를 통과시켜 유명무실한 심사였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으로 이어진다. 사고에 관한 거래소들의 약관이 제각각인데다 금융회사처럼 투자자보호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피해손해배상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것. 현재 피해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거래소 자체 배상안에 의지하거나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뿐이다. 그러나 관련입법이 전무해 소송 역시 쉽지 않다.

실제로 1년간 이어진 해킹사고로 투자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가상화폐 관련 입법이 1년째 미뤄지면서 법적으로 자산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응책 마련없이 불경기와 맞물려 대체 투자처로 인식되는 가상화폐가 또다시 투기열풍의 장이 된다면 가상화폐로 인한 피해는 또다시 투자자의 몫이다. 홍기훈 홍익대 교수는 "입법이 없어 피해 관련 변호사도,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시장 전체 규율을 정하는 것은 규제기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니트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美 금리인상·보호무역, 韓경제에 장기간 부정적”

한은 BOK경제연구소 보고서

강도는 약하지만 오랜기간 지속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보호무역주의 등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 경제에 장기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BOK경제연구소의 '미 정책불확실성과 위험회피 충격이 소규모 개방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김영주·임현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글로벌 리스크 확대에 따른 영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도는 약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1990년 1분기~2015년 4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김희주 기자

기까지 선진국 13곳과 신흥시장국 27개국 등 모두 40개국으로 구성된 소규모 개방경제를 대상으로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확대와 글로벌 위험회피성향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패널 벡터자기 회귀분석 모형(Panel VAR)을 통해 정량·정성적 분석했다. 소규모개방경제의 분석대상 변수로는 GDP와 소비자물가, 자본유출액, 명목실효율, 실질주가가 선정됐다.

분석 결과 미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과 위험회피성향 확대 요인은 모두 소규모 개방경제의 거시경제 변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회피성향 충격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금융이나 실물 부문을 단기적으로 크게 악화시켰으나 회복은 빠르게 이뤄졌다. 반면 경제정책 불확실성 충격은 점진적으로 위축시키는 대신 회복 속도는 느리게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은 선진국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신흥국에는 위험회피성향 증대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대외충격의 파급효과가 국가별 발전 정도와 경제구조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파급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금융시장 발전, 경제 펀더멘탈 개선 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

서울 집값 1.25% 상승... 10년 만에 최대폭

지난달 상승세, 강남권이 이끌어

지난달 서울의 집값 상승폭이 전월보다 배 수준으로 커졌다. 지난 2008년 6월(1.74%) 이후 10여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1.25%로, 전월(0.63%)보다 0.62%포인트 더 커졌다. 매물부족 및 수요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라고 감정원 측은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가격동향조사 결과는 8월 13일 대비 9월 10일 기준 집값을 비교한 것으로, 9·13 부동산 대책과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영향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특히 강남이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다. 강남권 11개 구 전체에서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동구가 2.18%로 상승률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서초구(1.90%), 강남구(1.80%), 영등포구(1.66%), 송파구(1.55%) 순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강남은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추가 상승 기대감과 개발호재 등으로 매수문의가 늘면서 인기단지 위주로 기존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분석했다.

강북도 매물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개발 호재 및 상대적인 저평가 인식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성동구(1.43%), 노원구(1.35%), 도봉구(1.20%), 용산구(1.15%)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경기도도 8월 0.05%에서 9월 0.47%로 상승폭이 커졌다. 같은 기간 인천은 -0.17%에서 0.01%로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수도권 집값 상승폭이 0.70%로 전월(0.24%)의 3배 수준을 기록했다.

지방의 경우 5대광역시 중 광주(0.67%)·대구(0.36%)·대전(0.18%)은 상승폭이 확대됐고, 부산(-0.13%)·울산(-0.59%)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8개도(-0.13%)는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가을철 이사수요로 하락폭은 작아졌다. /채신화 기자

드론 규제 완화... 완구용, 신고 없이 비행 가능

위험도 낮은 드론 규제 최소화

250g 이하 완구·레저용 드론 등 위험도가 낮은 드론 비행에 대한 규제가 최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드론안전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양한 드론이 출시되는 추세에서 단순히 무게를 기준으로 한 현행 드론 분류체계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완구·레저용 드론에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드론을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7kg 이하 기체 중 운동에너지 1400J 이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250g ~7kg 기체 중 운동에너지 1400J 초과 혹은 7~25kg 기체 중 1만4000J 이상)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모형·저위험·중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150kg 이하의 기체) 등 4가지로 분류해 관리한다. 또 위험도가 낮은 모형비행장치의 경우 기체신고 등 없이도 조종할 수 있게 한다.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드론 소유주만 등록하면 되고, 중위험·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현행대로 지방항공청에 소유자·기체형식·중량·용도 등을 신고하면 된다.

비행승인 역시 모형비행장치는 공항 주변 반경 3km 이내 비행만 필요해진다. 저위험·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 시 비행승인을

받도록 제도가 완화된다. 다만,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나 고도 150m 초과 비행 시에는 승인이 필요하다.

25kg 초과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기체 제작과 비행 안전상태를 확인받는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모형비행장치의 경우 조종자격이 필요 없고,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면 조종이 가능해진다.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조종을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비행경력이 필요하며,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조종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조종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관계기관 협의 및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항공안전법 시행령 등 법적 정비를 추진한다.

/채신화 기자

국토부-환경부 '국가계획수립협의회' 발족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 '제1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발족한다.

1일 양 기관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국토부 손병석 제1차관, 환경부 박천규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며, 2일 오후 서울스퀘어에서 발족식을 연다.

이날 행사에서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 16인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추진계획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추진계획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가계획수립협의회는 지난 3월 제정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근거로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시점 작성

단계부터 계획 수립 확정시까지 운영된다.

이번 1차 협의회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연계를 위해 구성됐으며, 내년 하반기 국가계획의 확정시까지 반기별로 차관급 회의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환경부의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 기간을 일치시킬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위한 국가계획 통합관리 방안도 논의한다.

또 지자체가 수립하는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자체 계획수립시점의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채신화 기자